



2019년 진행된 국제캠퍼스 외국어대학 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포스터가 외국어대학 2층 로비에 걸려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대학주보DB)



총학생회 선거 투표함 (사진=대학주보DB)

학생의 ‘하청업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회가 대학 사회에 있어 더욱 거시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통의 아젠다 발굴 통해 학생회 역할 스스로 찾아가야

전문가들은 학생회 존속을 위해 총학생회가 아젠다를 직접 발굴해 대학이 사회 속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임 교수는 “바뀐 시대에서 정치적 의제를 제기해도 큰 관심을 못 끌고 오히려 정파적 공방과 반감만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적 의제를 발굴하고 지식 창출 및 확산 기능을 살려 열린 공론장이 되는 데 도움 줄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학생회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슈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총학생회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 지진 등 해외 구호 활동에서 구성원 대상 모금 운동을 진행한 바 있고, 국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지원에도 모금 운동을 전개해 왔다.

학내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공약의 일례로 서울·국제캠 ‘연합 선본제도’가 있다. 작년 공청회 당시,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 서인하(문화엔터테인먼트학 2020) 부후보(현 총학생회 부회장)는 “학사제도를 비롯해 학생 자치에 필요한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연합 선본의 목적”이라며 “공동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함께 논의를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캠퍼스 간 축제와 같은 일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은 좋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음 기획 기사 연재는 ‘학생회의 역할 부재’로 이어지며 총학생회 역할이 줄어드는 현 상황과 대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다원화된 학생 관심사, 공통의 아젠다 발굴해야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위기의 학생자치 - 2회 대학 사회의 개인화가 가져온 학생 자치 위기

학생 자치 위기의 배경으로 꼽히는 요인은 대학 사회의 개인화다. 시간이 흐를수록 학생들의 관심사가 다변화되며 공통 이슈는 사라져 갔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회의 역할이 줄어드는 배경이라고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학생회가 대학 사회 아젠다를 발굴해 스스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역대 총학생회 공약의 흐름 거국적 성격에서 생활 밀착형으로

그동안 진행된 총학생회 선거 공약을 훑어보면, 한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국가적 현안을 다룬 공약이 주를 이뤘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선거 공약의 키워드는 학생 개인의 문제로 변했다. 현재와 같은 총학생회 체제가 정립된 것은 1984년 ‘학원자율화조치’ 이후다. 이전까지는 학교와 정부의 통제를 받아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졌다. 당시 대학생 최대 관심사는 그들의 자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사회적 현안이었다.

1990년 11월 진행된 서울캠퍼스(서울캠) 23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이길영(정의4) 정후보와 박종태(물리3) 부후보의 공약에는 ‘반민중적 UR(우루과이 라운드)협상 반대’, ‘재벌토지 환수’, ‘국방예산 삭감’ 등이 눈에 띈다. 경쟁 후보였던 한철수(신방3) 정후보와 최성용(법학3) 부후보의 공약으로는 ‘거족적 통일 운동 전개’, ‘민중생존 짓밟는 미국반대 투쟁’ 등이 있었다.

공동 공약으로는 ‘안기부 해체’가 있었다. 당시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학생운동 성격의 공약이다. 박윤재(사학) 교수는 민주주의가 위협받던 80년대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해 “독재를 종식시키고 사회를 민주화시키는 것이 학생 이익보다 우선이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90년대 후반에는 개인주의가 스며들며 총학생회 공약 변화가 감지됐다. 1996년 11월에 진행된 서울캠 29대 총학생회 선거는 학생운동의 쇠퇴를 촉발시킨 ‘한총련 사태’ 평가가 선거 쟁점이었다. 공약도 학생 교육권과 실질적인 대학 생활에 중점을 두었다. 서울캠 29대

총학생회에 당선된 박정윤(생물93) 정후보와 김영필(경제93) 부후보의 공약은 당시 도입되던 ‘학부제’ 문제를 다루며 교육권에 무게를 뒀고, ‘젊은 영화제’, ‘목요 문화제’ 등 문화생활 증진에 중점을 뒀다.

다원화된 학생 관심사 변화한 대학 사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소통과 교육 여건에 초점이 맞춰졌다. 2001년에 진행된 수원캠퍼스(현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의 키워드는 ‘소통’이었다. 당시 인터뷰를 보면 “학우들의 의견존중”, “홈페이지를 통한 학우들과의 실시간 소통”, “학우들의 의견 반영”이 언급됐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학생 개개인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공약에 반영됐다.

2008년 진행된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양 캠퍼스 후보들은 모두 등록금 문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중백(사회학) 교수는 “IMF 이후로 비정규직이 확산하고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확신이 줄었다”며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짚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2012년

진행한 설문에서도 총학생회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사회적 문제 제기’(5%)와 달리, ‘등록금 인하’(32%)와 ‘교육의 질 향상’(23%) 등 대학 생활 문제가 꼽혔다.

이후 총학생회 공약은 더욱 세분화·구체화됐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학교 총학생회 선거 공약만 하더라도 수업권, 자치 기구의 투명성, 소통, 청년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공약이 등장했다.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임성호(정치외교학) 교수는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며 학생의 심화한 개인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 바 있다.(축제를 위한 총학? 역할찾기 시작해야/대학주보 1718호/2024.03.05.) 시대 변화 흐름에 맞춰 총학생회 공약이 세분화, 다원화된 것이 개인주의 강화와 정보화 시대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질문에 김 교수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공약 가운데 학생회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게 됐다”며 “학생 맞춤형 공약을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김 교수는 “학습 환경 개선 등의 요구를 학생회가 학교에 전달하기만 한다면 결국 학생회는